



오월결상위원회, 광주에 제주 4·3 조형물 '4월 결상' 건립 인권연대 오월결상위원회가 2일 광주 광산구 광산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제주 4·3 희생자를 기리는 '4월 결상' 설치 제막식을 열었다. /뉴스시

전남도, 냉동 난자 시술비 등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비 13만원·남 5만원 이내 지원

전남도가 이달부터 신혼부부와 난임부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과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시행한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아이 낳기를 바라는 부부(사실혼·예비 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13만 원·남 5만 원 이내)를 지원해 임신 전에 장애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는 난소기능 검사(AMH), 초음파 검사, 정액 검사 등이다.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사업은 6개월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둔 여성 중 난소 기능검사 수치가 1.5 이하인 30~40세를 대상으로 가임력 보

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비의 50%(최대 200만 원·1회 지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결혼 여부는 무관하나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난소기능검사 수치 1.0 미만) 20대 여성도 지원 가능하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은 냉동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 시술을 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의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다. 두 사업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사업 성과 평가 등을 통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호 기자

광주시, 외국인주민 광주생활가이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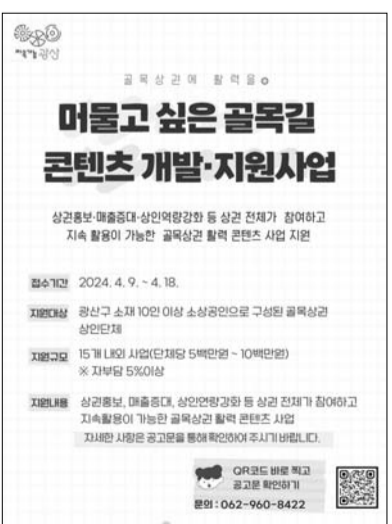
생활법률 등 7개 언어...한국어와 자국어 동시 수록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 '종합생활안내서'가 발간됐다. 광주시는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종합생활안내서 '외국인주민 슬기로운 광주 생활 가이드'를 출간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생활가이드'는 '광주소개'를 비롯해 '등록과 체류', '생활법률', '한국어교육 안내', '건강과 의료', '임신과 출산' 등으로 구성됐다. 또 지역 5개 자치구별 개별만한 곳과 보육정책 등이 수록됐다. 책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몽골어 등 7개 언어로 제작됐으며

한국어와 자국어를 좌·우로 동시에 볼 수 있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책자 뒷면에 있는 정보부처(QR 코드)가 수록돼 모바일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책은 외국인주민이 많이 찾는 자치구 가족센터,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 대학교 국제 교류협력처 등에 비치됐으며 광주시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온라인 '광주 가이드'에 생활정보, 즐길거리, 체류·비자, 취업·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광산구 '머물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 지원

골목상권 상인단체 대상 활성화 콘텐츠 공모



광주 광산구는 민생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머물고 싶은 골목길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상인들의 활성화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내용이다. 광산구 소재 10인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상인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매출 증대, 역량 강화 등 골목상권의 매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제안을 18일까지 모집한다. 광산구는 참여 의지, 실행 가능성, 효과 등을 심사해 5월 중 15개 단체를 선정, 최대 1000만 원까지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를 작성, 전자우편(kdy4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특색있는 골목상권 활성화 콘텐츠 개발·지원을 위해 상인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

주52시간 선언 환자 못떠나는 광주 대학병원 의사

전남대·조선대병원 "전체 변동 계획 없어"

전남 외래·암 환자, 수술 일정 차질 우려

"현실적으로 바로 환자 곁을 떠나기는 어렵죠."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단축진료를 시작한 이틀째인 2일 오전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남부터 의대 증원 정책 반대 여론과 전공의 이탈에 따른 업무 가중을 고려,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상급 병원인 전남대병원에서는 큰 일정 변동 없이 교수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다. 단축 진료 안

내문도 붙어있지 않았다. 전공의 이탈로 인력이 부족해지면 서 필수과로 불리는 내과·외과·응급의학과·신경외과 등은 20~30명씩 긴 대기줄이 이어졌지만 진료는 예약 순서대로 진행됐다. 신경과의 경우 매일 3~6명 전문의가 외래진료를 하는데, 이날도 교수 6명이 환자를 맞이했다. 접수 창구에 있던 의료진은 "그대로 예약 진료 진행하냐"는 전화 문의에 "평소처럼 다들(교수)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근무한다"고 답했다. 흰 가운을 걸친 전문의는 단축 진

료 소식에도 환자 차트를 보며 곁을 재촉했다.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친 전문의들은 "고생하십니다"라는 짧은 말로 서로를 위로했다. 외래진료·수술 축소 소식이 환자들은 '수술 약 처방에 차질이 생길까' 염려했다. 전남 무안에서 광주 전남대병원 내분비외과를 찾은 장모(57)씨는 "지역에는 큰 병원이 없어 두 달마다 전대병원을 찾는데, 혹시나 담당 교수님이 못나오셔서 약 처방을 제때 못 받을까 걱정이다"고 밝혔다. '혜암암 수술을 앞둔 이모(73·여)씨는 "2주에 한 번 항암치료를 받는데 수술 일정을 못 잡을까 염려했다"고 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일괄 주 52시간 근무를 보류한 상태다.

전남대학교병원 교수 420명 중 217명이 시작서를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근무를 중단한 교수는 없다. 두 병원 모두 각 진료과나 교수마다 일부 진료 시간 변동은 있을 수 있으나 대규모 일괄 조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학교병원도 예약환자 수술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근무 시간을 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학교병원 관계자는 "교수마다 개별적으로 일정은 조정할 수 있으나 아픈 환자들을 매몰차게 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남대조선대학교병원은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나 회의를 거쳐 단축진료에 대한 논의를 할 방침이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교육청, 늘봄학교 확대 4월부터 45개교 운영

2학기 전면시행 위한 1학기 늘봄학교 확대

광주시교육청이 올해 1학기 우선시행 늘봄학교를 32개교에서 45개교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학기 전면시행을 대비해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우선시행 학교를 확대했다. 추가 운영 13개교에는 늘봄지원센터 등을 통해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초1 맞춤형 프로그램 강사를 채용해 배치될 계획이다. 또 운영에

필요한 환경개선비, 재료비, 운영비 등도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 교육청과 학부모의 쌍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1학기 우선시행 늘봄학교의 학부모 27명으로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다. 위촉직과 사전 교육 실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들은 광주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와 소통

하는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1학기 우선시행 늘봄학교 확대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우수사례를 자세히 파악하고,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2학기 전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기존 돌봄교실과 선택형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는 1학년생 참여율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운영 중인 늘봄학교에서는 동화구연, 스포츠놀이 등 총 59개의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주 기자

동구, 기회와 활력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도약 총력

동구는 '기회와 활력을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도약을 위한 '제3기 동구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임택 구청장을 비롯한 청년 정책전문가와 청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동구 청년 정책 기본계획(2024~2028년)'과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제2차 동구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회와 활력을 만드는 청년친화도시, 동구'를 비전 삼아 44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청년문화 ▲일자리·경제활력 ▲교육 ▲주거·복지 ▲참여·권리 등 5개 전략 분야 45개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제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의 '청년친화도시'라는 개념을 '청년 친화도시'로 전환하고 전년 대비 15개 사업을 추가 편성해 ▲동구 청년센터(D.DT) 운영 ▲청년창업소 운영 ▲청년실업 설계학교 ▲청년의 집 운영 등 주요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승진 청탁 금품수수 혐의' 치안감 공소사실 전면부인

"승진 청탁도, 금품 받은 적도 없다" 공소사실 반박

브로커에게 승진 청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일 102호 법정에서 각기 뇌물수수와 제삼자 뇌물교부,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A(59)치안감과 B(57)경감, 브로커 성모(62)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2년 2월 브로커 성씨에게 2차례에 걸쳐 광주청 소속 당시 경위였던 B경감의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경감은 앞서 같은 해 1월 브로커 성씨에게 자신의 승진 명목으로 A치

안감에게 전달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 성씨는 '승진 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B경감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A치안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는 B경감이 자신의 상급자의 소개로 A치안감과 친분이 있다는 브로커 성씨에게서 승진 인사 청탁 명목 금품을 건넨 것으로 봤다. 브로커 성씨가 건네받은 돈은 결국 A치안감에게 전달돼 당시 경위였던 B경감의 승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A치안감 측은 전면 부인했다. A치안감 법률대리인은 "승진 청탁을 받은 적도,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

가 없다. 단지 돈을 줬다는 브로커 성씨의 일방적 진술과 간접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다"면서 "그동안 인사권자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B경감은 "성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맞지만 A치안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주거나 청탁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현직인 A치안감과 B경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반면 브로커 성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성씨는 첫 공판에 앞서 재판장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5월 14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다음 재판에선 양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어진다. /김도기 기자

순천경찰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순천경찰서는 2일 오전 경찰서 봉화마루에서 '오늘도 안전하고 행복한 순천만들기'를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찰서 소 기능의 경찰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화된 범죄예방·대응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승인 경찰서장이 주재하고 기병 별 과장, 지역경찰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5대범죄 발생 및 112신고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영·농활동 등 이들이 등 외부활동 증가로 절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번기 및 행락철 절도예방' 기능별 전략 및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형과 농어촌형으로 구분된 지역맞춤형 범죄취약개소 선정 △기동순찰대 가용경력 배치 등 범죄예방 활동 방안 논의 △기능별 민·관·경 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차단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및 대응책을 세웠다. 국승인 순천경찰서장은 "주민들의 요구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 해결하는 '정성치안',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치안정책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주민참여치안'을 통해 선제적 예방차원의 경찰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구, 장애 체험하며 '미리 장애인의 날' 행사 눈길

공직자 휠체어 체험 등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진행



서구가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민·관협력 장애인식 개선 활동에 나섰다. 서구는 지난 1일 서구청 들불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와 함께 '미리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감수성 향상 및 공직자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서구 장애인 정책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업무 중 공직자 휠체어 체험 ▲장애당사자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식개선 스포츠 체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이날 김이강 서구청장과 공직자 15명은 직접 휠체어를 타고 구청 곳곳을 다니며 업무를 수행하고 장애 체험을 통해 느낀 점을 생각카드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체험이 끝난 후 경험한 수기를 나누며 현실적 차원의 정책 제안을 펼치는 공감 토크쇼를 진행했다. 토크쇼에 참석한 김 청장은 "화상 실무부터 회의실까지 다녀봤는데 장애인 소변기가 가장 인접에 있고 회의실 문 여는 방법의 어려움 등 섬세함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며 "장애인을 다르게 보고 뭘 해주는 것이 아닌 누구나 함께 불편함 없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서구 사업 전반에서 '무장애도시 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선주 기자